

이 보도자료는 14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			보 도 자 료		2023. 7. 26.(수)
주책임자	합동수사단	단장	이정렬	02-3219-2303	자료문의 : 합동수사단 전화 : 02-3219-230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희경 전화 : 02-3219-4420 팩스 : 02-3219-2397	
	금융감독원	금융사기대응단 부국장	박정은	02-3145-8140		
	FIU	기획행정실 팀장	박정원	02-2100-1730		
		가상자산검사과장	이종림	02-736-1740		
	서울지방국세청	과학조사담당관	윤창복	02-2114-2700		
	관세청	외환조사과 과장	전성배	042-481-7930		
	한국거래소	특별심리부 팀장	박완선	02-3774-8875		
	예금보험공사	조사기획부 팀장	황우진	02-758-0962		

『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』 출범

-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투자자 보호 -

- 오늘(7. 26.) 검찰, 금융감독원, FIU, 국세청, 관세청, 예금보험공사,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·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「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」이 금융·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함
 - '2030 세대'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음
 - 최근 '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' 제정('24. 7. 19. 시행)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,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됨
 - 이에,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,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되었음
-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'부실·불량 코인 발행·유통' 과정을 분석하고,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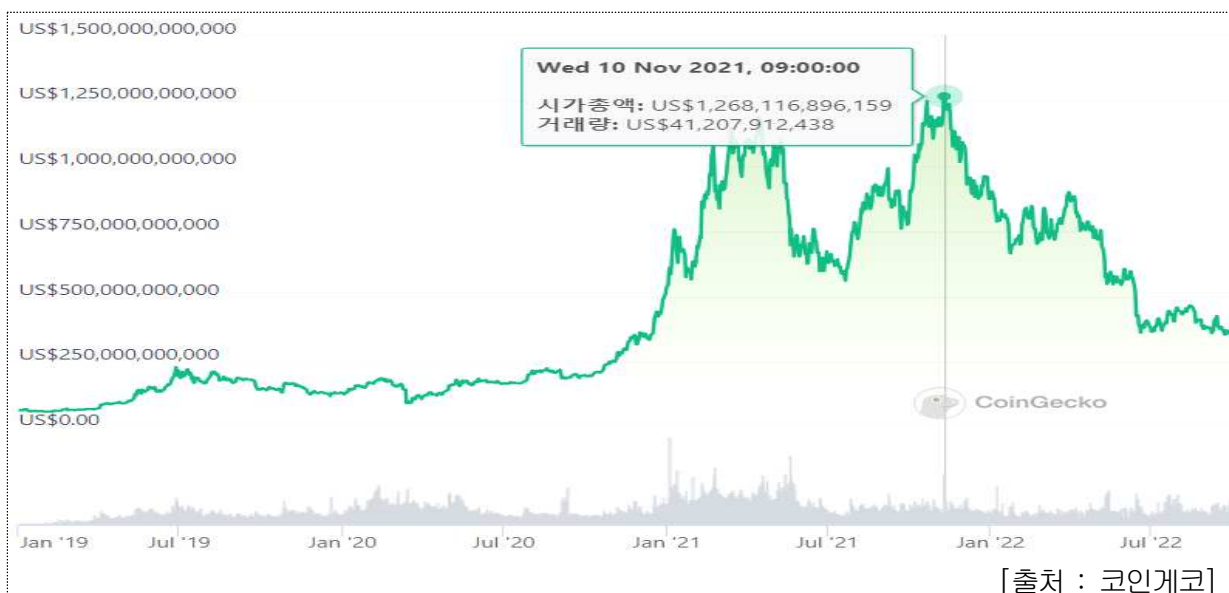
- ① 가상자산 발행·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·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'조사·분석팀'과,
- ② '조사·분석팀'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과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'수사팀' 체계로 운영할 계획임
-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·불량 코인의 발행·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임
- 향후에도 검찰은 국민재산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아,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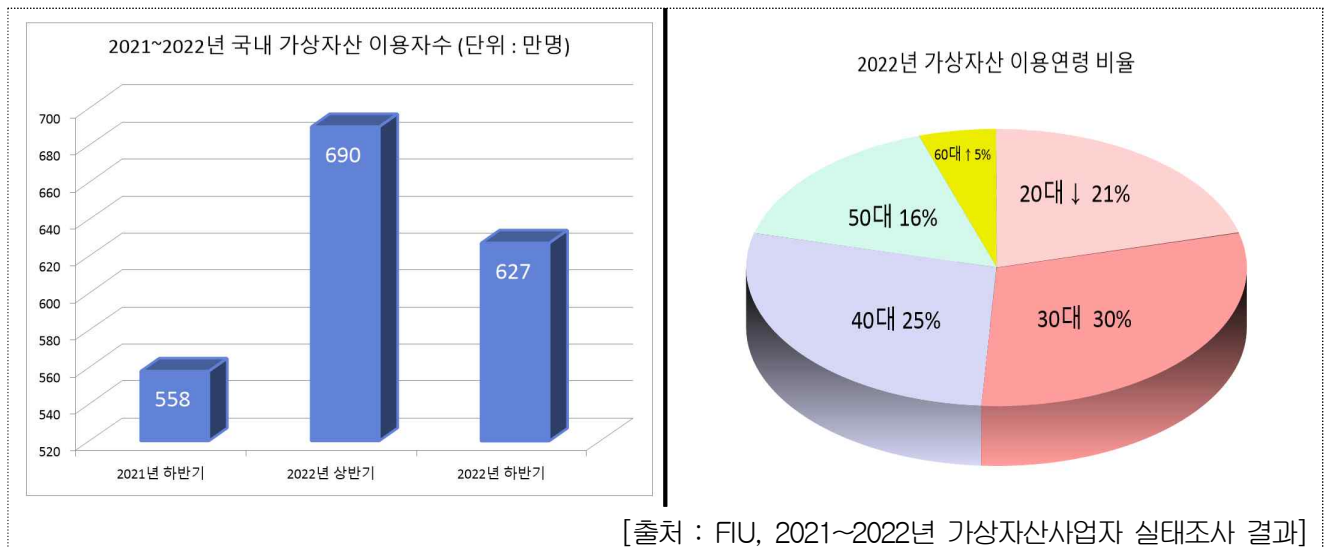
출범 배경

■ 가상자산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공백

- 2009년 비트코인 등장 후 가상자산은 주식·부동산과 함께 중요 투자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, 대표적 가상자산인 '비트코인'은 시가총액이 최대 1조2,600억달러('21. 11. 10. 기준)를 넘어서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1년 말 4,3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함



- 2014년 국내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등장한 후, 불과 10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① 이용자 약 627만명에 이르는 등 '2030 세대'를 주축으로 '4050 세대'까지 모든 연령대 국민이 거래 중으로, ② 시가 총액 약 19조원 , ③ 1일 평균 거래액 약 3조원에 달함



- 그동안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·상장·유통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음
- ‘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’ 제정(‘24. 7. 19.시행)으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나, 후속법령 제정과 2단계 입법 추진 등 가상자산 건전화, 이용자 보호 법제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됨
- 이에 따라 주식·부동산과 더불어 서민들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가상자산의 규제·처벌 공백이 지속될 경우,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됨

▶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적 역량 결집 중

- 유럽의회(EU)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법률 MiCA(Markets in Crypto-Assets) 통과
- 미국 SEC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‘바이낸스’를 제소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

■ 부실·불량 가상자산 난립과 상장폐지

- 최근 1,050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고, 1,010개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

	거래중단(상장폐지)			투자 유의종목 지정		
	2021년	2022년	합 계	2021년	2022년	합 계
원화마켓*	70	75	145	92	149	241
코인마켓*	744	164	908	591	178	769
합 계	814	269	1,053	683	327	1,010

[출처 : FIU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]

- * 원화마켓은 원화와 암호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5개 거래소(업비트, 빗썸, 코인원, 코빗, 고팍스), 코인마켓은 암호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(22개)

** '23. 1.~6. 현재 원화마켓 기준 총 37개 가상자산 추가 상장폐지

- 특히, 2022년 국내 유통 625개 가상자산 중 단독상장은 389개로 62.3%를 차지하고, 그 중 시가총액 1억원 이하 가상자산이 132개에 이르는 등 실체 불명의 부실·불량 가상자산이 난립하는 실정임

	시가총액별 단독상장* 가상자산 비율				
	1억 이하	1~10억 이하	10~50억 이하	50~100억 이하	100억 초과
원화마켓	38개(20%)	44개(23%)	56개(30%)	19개(10%)	31개(17%)
코인마켓	94개(47%)	62개(31%)	24개(12%)	8개(4%)	13개(6%)
합 계	132개(34%)	106개(27%)	80개(21%)	27개(7%)	44개(11%)

[출처 : FIU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]

- *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상장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, 상장폐지 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함

- 자금력과 유동성이 부족한 부실·불량 가상자산의 난립은 급격한 가격변동을 초래하고,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 직결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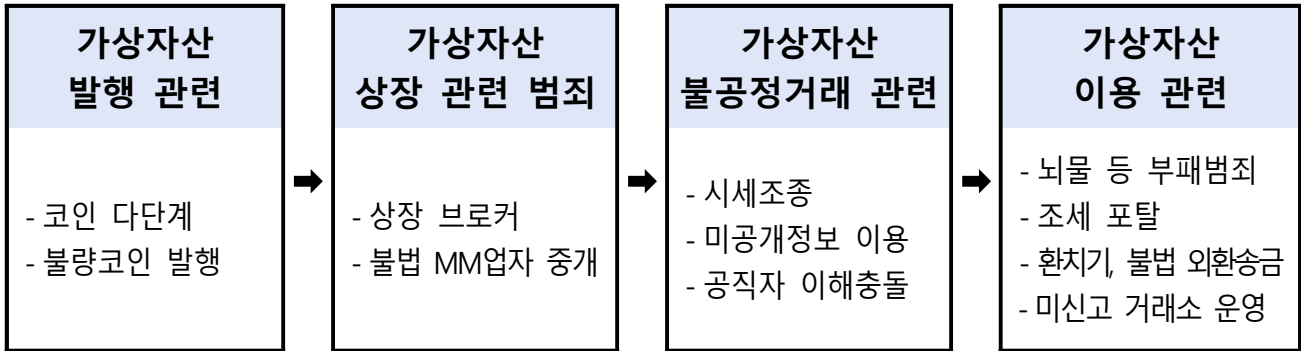
- 최근 2년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*은 '21년 하반기 65% → '22년 하반기 67%로 상승하는 등 투자 위험은 매년 증가 추세임

- * 가격 변동성 :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을 $[(\text{최고가} - \text{최저가}) / \text{최고가}]$

■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출현 및 피해 증가

- 부실·불량 가상자산 난립 속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, 시세조종, 불법 환치기, 코인 다단계 등 각종 신종범죄가 출현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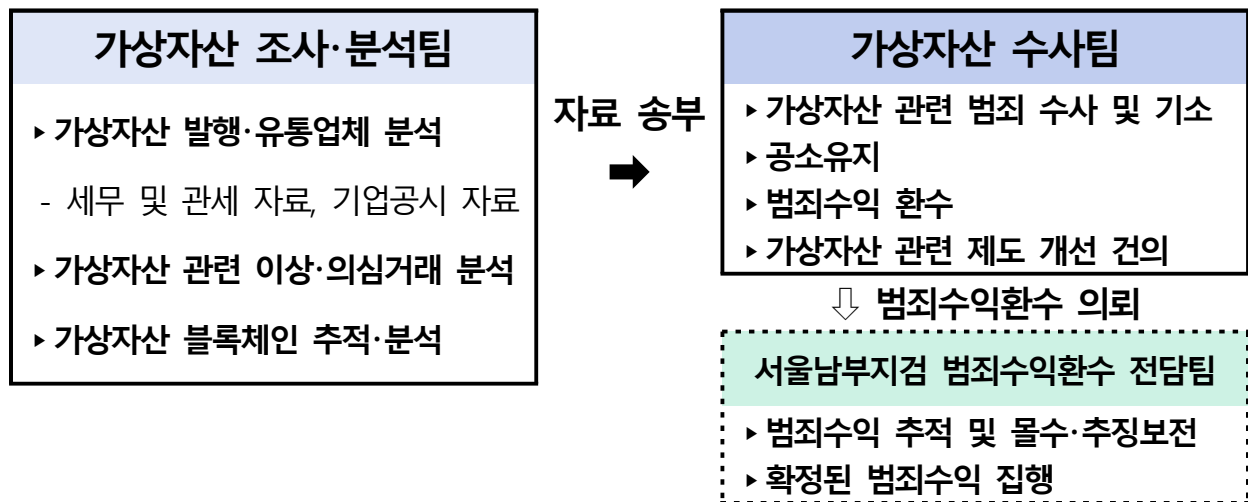
※ [첨부]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유형 참조



- 탈세·뇌물·외국환거래법위반·자금세탁 등을 비롯하여 가상자산 발행·상장·유통 등 과정 전반에서 범죄 의심거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
 - 월평균 FIU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「'21년 66건 → '22년 900건 → '23년 943건」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1,322% 급증함
 - 최근 '2030' 세대는 물론 '4060' 세대까지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후 막대한 손실을 입는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'강남 납치살인 사건' 등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도 발생함
 -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최근 5년간 합계 5조 3,000억원을 상회하고 「2017년 4,674억 → 2022년 1조 192억」으로 급증함
- ➡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과 유사한 성격의 금융·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·감독·조사·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·금융·증권·조세 당국 등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상황임

- ▶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「①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, ② 가상자산 거래 흐름·보유자 추적 및 동결, ③ 해외 유출·은닉된 가상자산 환수(사법공조)」가 핵심
- ▶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상자산(24시간 거래가능, 해외 거래소 이용 용이)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석·추적·수사 등 모든 절차에 전문인력이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협업을 필요로 함
- ▶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·증권에 대하여는 「시장감시·심리 → 조사 → 검찰 고발·통보 → 수사」 등 조사·수사 협력체제가 갖춰져 있으므로,
- ▶ 가상자산 시장에도 금융·증권범죄 조사·수사체계 이식(移植) 필요하여 FIU·금감원·예보·한국거래소 등 금융 유관기관과 국세청·관세청 등 조세 유관기관 및 검찰 수사역량을 결집하여 전문인력 약 30여명으로 「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」 출범

■ 구 성



- (조사·분석팀) 국세청, 관세청, FIU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 ⇨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 포착 ➡ 불량·부실 코인 조사 후 수사팀 송부
- (수사팀)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, 검찰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 구성 ⇨ 수사·기소, 공소유지,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
- (범죄수익환수 전담팀)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·조사·분석팀과 협업 ⇨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·추징보전 ➡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 환수

■ 중점 조사·수사대상

-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 된 **상장폐지**,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
유의종목, 가격변동성 큰 종목*을 선별, 중점 조사 및 수사

* 상장폐지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어 조사 필요성이 큰 반면, 가상자산
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

- ❶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, ❷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
관련 상장 비리, ❸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
자료 수집·조사 후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수사 착수

➔ ① 상장 청탁 업체,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

② MM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, 미공개 정보 이용

③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, 관세 포탈

④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

⑤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 철저히 수사

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「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」 출범을 통해, 법령·제도 미비로 투자자
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·조세 당국 등
법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하여
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임

- 합동수사단에 참여한 금융·조세 및 수사당국과 유관기관은 가상자산에
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음

- 「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」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
리스크를 제거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, 건전한 가상자산
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켜,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
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☑

[첨부]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유형

▶ 가상자산 발행 관련

- (코인 다단계) 가상자산 발행·채굴 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단계 또는 리딩방을 통해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
- (불량코인 발행) 실체 없는 불량 가상자산 발행·판매 빙자 금원 편취

▶ 가상자산 상장 관련

- (상장 브로커) 가상자산 발행업자로부터 가상자산 선취매 등 수익을 받고, 거래소 담당자에게 상장 청탁·리베이트(‘상장 FEE’) 명목 금품 공여·수수
- (불법 MM* 중개) 가상자산의 인위적 시세 부양을 위해 발행업자와 MM업자를 상호 중개하며 수수료 취득

* Market Making :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서 나아가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와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

▶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

- (미공개 중요정보 이용) 시장공개 前 가상자산의 발행, 상장폐지, 호재성·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
- (가상자산 시세조종) 허위사실 유포, MM세력 동원 통정·가장매매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
- (사기적 부정거래) 가상자산 백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·표시하거나 타인의 오해를 막기 위한 표시를 인위적으로 누락한 것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

▶ 가상자산 이용 관련

- (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성) 공직자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뇌물 등 금품 수수, 불법 정치자금 조성
- (조세 포탈)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계존비속간 가상자산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, 법인 사주가 가상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각종 조세 포탈
- (불법 외환거래) ① 외화로 가상자산 구매·전송·현금화 후 원화로 교환하는 가상자산 환치기, ② ‘김치프리미엄’ 목적으로 가상자산 자금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 불법 외환송금
- (자금세탁 및 해킹) 범죄수익을 처분 가장·은닉시 가상자산 이용,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·개인지갑 등 해킹, 악성코드 유포, 가상자산 거래소 가장 피싱·스미싱
- (미신고 거래소 운영)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·보관 수수료 수취, 리딩방 통한 유사수신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